미국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 참관기

글 · **이정옥** jolee@kdemo.or.kr

세계 언론은 연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집중했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출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적 사안에 투표를 해야 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와 미국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난달 1일(토)부터 7일(금)까지 진행된 미국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에 사업회 이정옥 국제사업단장이 참석하였다.

미국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은 미국 대선과 함께 각 주에서 실시된 주민 발의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발의안을 주도했던 활동가를 만나 주

민 발의안의 주된 쟁점과 각 주의 직접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들어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정옥 국제사업단장이 아시아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하였고, 우르쓰 렐쓰타브 스위스 경총 부사무총장, 유럽 IRI(유럽 주민 발의 및 주민 투표 연구소) 대표인 부르노 카우프만, 독일의 직접 민주주의 전문 기관인 '더 많은 민주주의를(More democracy)' 을 이끌고 있는 다니엘 쉴리를 비롯 10명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는 1904년 오리건 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투표가 진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2천 155건의 주(州) 단위 주민 발의가 투표에 회부되었고, 이 중 41%가 통과되었다. 현대적인 주민 발의 운동은 지난 1970년대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 감면안과 함께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 주민 발의 건수도 그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주민 발의 수에 비례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된 건수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과하여 입법화된 건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에는 379건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어 그 중 167건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보면 총 223건의 주민 발의가 주민 투표에 회부되어 이중 92건이 통과되었다. 190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23개주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주민 발의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의 주민 발의와 주민투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2개의 주민발의안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콜로라도 주에서는 17개의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되었다. 여기에는 초고속 철도 채권과 아동 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에서부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안(이는 역으로 범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석방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되었다. 그 중에서 올해 주민 투표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동성 간

각 진영에서 캠페인 깃발로 주민 발의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업회 소식

결혼 금지 헌법 개정안은 보수주의자들과 샌디에고 소재 교회가 주도한 것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최고 법원이 동성 간 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는 찬반 양 측에서 수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이 우세했다고 하나, 실제 지난 투표에서는 52.2%로 가결되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 주민 투표안은 자본과 노동 간의 상충되는 주민 발의안이 제시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캠페인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먼저, 자본 측에서 제시한 소위 '일할 권리' 법안인 '오픈 숍(Open Shop)' 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면서, 노동 측에서는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이번 가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만약 이 안이 가결되었다면, 노조와 사용자 측에서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고용이 되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노조의 임금 협상 과실에 무임승차할 사람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노조의 힘이 약화될 우려가 생겼을 것이다. 이 안은 노조의 세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인식과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결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된 가운

동성애 결혼금지 주민 발의안에 대한 반대 캠페인

미국 하원의원인 민주당의 낸시 팰로시가 동성애 결혼금지 주민 발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데 주민투표에 회부되었다. 또한 자본 측이 제시한 이른바 '월급보호법'은 공공 노조가 월급에서 노조 회비를 공제하기 전에 노조원들 각각에게서 개별적으로 (공제)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두 가지 안이 제시되면서, 노동 측에서는 자본의 힘을 축소하는 역제안을 제시했는데, 해고를 보다 어렵게 하는 법안과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본 측에서 발의한 안들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고, 노동 측에서 발의한 안들은 철회되어, 노동과 자본 간의 1라운드는 이렇게 종결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정치인을 뽑는 것 이상이다. 100여 년에 걸쳐서 현대 직접 민주주의는 미국 전역에서 시민의 강력한 입법 도구로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미국적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정치 ·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시민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해서 이를 주민 발의와 주민 투표로 승화시키는 데 정치 컨설턴트와 캠페인 관리자의 역할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를 한 릭 클로센(Rick Claussen)과 같은 정치 컨설턴트와 제프 랜들(Jeff Randle),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초로 선출직 공무원인 주지사를 소환하는 데 성공한 테드 코스타(Ted Costa)와 같은 활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릭 클로센의 전략 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주민 투표 캠페인에서 93%의 승리를 거머쥔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제프 랜들은 주민 발의안을 둘러싸고 다른 단체나 집단과 효과적으로 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다. 이들의 경험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장벽이 높고, 주민 발의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해서 캠페인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여긴다.

글 | **이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장